



새 정부 국정 연계 지역발전 로드맵 본격 도, 스마트도시 조성 '순항'

도, 김 지사 주재 전략회의

새만금 RE100 산단 구축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 현안 공유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등
후속대책 마련에 초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도정 핵심사업을 대거 반영하면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해 후속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열린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를 직접 주재했다. 보고회에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북의 핵심사업들을 공유하고, 이를 도정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성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추진 일정 세분화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정치권과의 협력 구도 △예산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조성 및 새만금 SOC 확충과 RE100 산업단지 구축,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미래성장동력 확보,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은 전북자치도가 이번엔 관철시킨 핵심 과제들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정과제 분석·대응 보고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전북 핵심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농생명 전통산업부터 미래 첨단산업,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복지·안전망 확충까지 전북 발전의 모든 축이 이번 국정과제에 고르게 반영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과제들이 단순히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우선 각 중앙부처의 이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추진의 논리적 근거를 강화해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기존 사업은 국정과제 방향에 맞게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함으로써 사업별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연구원도 실·국 단위 협력체계를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한다.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해 부처별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정책 세미나와 전문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중앙부처 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도정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도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하고, 서울중앙협력본부 전담상황실을 운영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등 도정 지휘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각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릴레이 면담

을 이어갔다. 아울러 윤준병·임오경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며 전북 현안의 대거 반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 지사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도와 정치권이 수개월간 정방위 설득과 협의를 거쳐 얻어낸 성과"라며 "새만금 사업과 올림픽 유치, 첨단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들이 정부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속조치 또한 정치권과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전 17건이 의결됐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방송법·양곡관리법·농안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던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

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37회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심의·의결된 법률공포안 15건에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

송된 5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토부 주관 공모 잇따라 선정돼... 주민 삶의 질 박차

전주시 거점형 스마트도시 거점 삶아 체감 서비스 실증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을 통한 스마트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무주군, 순창군이 선정돼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 도시안 전망은 범죄, 화재 등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CCTV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각 시군의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에 수집하고, 수집된 다른 시군 데이터를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망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군산시는 2025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돼 총 24억원(국비 12억, 지방비 12억)의 예산을 투입, 2026년까지 스마트 횡단보도, 실시간 신호제어·신호개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집중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정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사전컨설팅과 국토부장관 공모사업 선정 건의 등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19일 2025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전국 유일하게 선정된 전주시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24억원(국비 160억, 지방비 160억, 민간 4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찾아가는 생활SOC, 초개인화 AI 헬스케어, AI 기반 도시안전 등 12개 스마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8월 중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 선정 성과를 기반으로, 전주를 스마트도시 거점으로 삼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우수사례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들은 전북자치도가 데이터와 AI 기술 기반의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내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화재안전조사

전북소방, 국가기반시설도 포함 총 244개... 연말까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내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연말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말하며, 공항·철도·항만시설을 비롯해 국가산업단지 등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지하구 51개소, 공항·철도·항만시설 8개소, 지정문화유산 214개소 등 총 32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 가운데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244개소를 대상으로 추

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및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 장애요소 사전 제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집중된다.

소철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국가기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지속 추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